

## 성직자회에서 성직자 통치규정 개정의 적용과 의미: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588조 제2항 개정(derogatio) 답서를 중심으로\*

김현조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조교수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1. 들어가는 말
2. 축성생활회의 유형과 통치의 권한
  - 2.1. 축성생활회 일반과 통치권
  - 2.2. 성직자회와 비성직회
  - 2.3. 성좌설립회와 교구설립회
  - 2.4. 재속회와 사도생활단
  - 2.5. 성좌설립성직수도회
3. 제588조 제2항 개정의 적용과 의미
  - 3.1. 제588조 제2항을 개정하는 답서 내용
  - 3.2. 답서의 적용
  - 3.3. 답서의 의미
    - 3.3.1. 형제적 (공동)생활
    - 3.3.2. 은사적 공동체
    - 3.3.3. 고유법
4. 나오는 말

\* 본 연구는 202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1. 들어가는 말

교회는 일반 사회나 국가처럼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통치 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달하시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들에게 전해진다. 이러한 교회의 통치권에 평신도나 비성직<sup>1)</sup> 축성생활회원들은 배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느님 백성과 분리되어 군림하는 통치를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통치를 전달하셨다. 따라서 성직자만이 통치 자격이 주어진 특권처럼 구성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인다(마태 16,13-20; 마르 8,27-30; 루카 9,18-21; 마르 10,35-45 참조).

그리스도의 뜻이 생생하게 실현되던 교회 초기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았다. 평신도의 교회 통치권 참여는 마티아 사도 선출에서 추정할 수 있다(사도 1, 15-26). 또한 통치에 있어 평신도의 공동책임성 원칙은 변함없이 지속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4세기경부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점차 평신도들이 수행하였던 임무가 성직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에 이르러서는 평신도의 지위가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17년 법전에서는 로마 교황이 임의로 통치권자인 주교를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규정된다. 교황 선출도 12세기까지 로마 성직자와 그리스도교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1179년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부터는 추기경들에게 넘어간다.<sup>2)</sup>

이처럼 교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드러난 통치권 자격과 참여 문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가 성직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드러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친교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았고 통치권에 있어서도 평신도의 참여를 통해 함께 식별해가는 시노달리타스(sinodalitas) 실현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법 규정에 다소 변화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큰 영향 없이 성직자 중심

1) 본 연구자는 본고에서 성직자회와 평신도회의 구분이 수도자 신분을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룬다. 또한 교황의 답서에도 평신도 회원이라는 개념을 피하고 비성직회원(il sodale non chierico)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평신도회’라는 표현 대신 ‘비성직회’라 하고 ‘평신도수도자’ 대신 ‘비성직수도자’라 표기한다.

2) 박동균, 「평신도의 신분: 현행 교회법전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상』 13(1995, 여름), 30-32 참조; 루이지 사바레세,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교제제도』, 박희중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99-100 참조; 호세 카스타뇨, 『교회 헌법학 입문』, 한영만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1), 140-141 참조.

의 통치권 규정의 적용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제129조)<sup>3)</sup>. 이는 축성생활회<sup>4)</sup>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안에서 축성생활회는 본성상 통치에 있어서 교회의 제도처럼 성직자 중심의 흐름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과 무관하게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이러한 본성을 지닌 축성생활회는 교회의 돌봄을 받으면서 교계적 성격도 주어졌기에 성직자가 통치하는 규정에 예속되기도 하였다(제588조 제2항). 그러나 현 교황 프란치스코의 답서로 제588조 제2항이 개정 적용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성직자회에서 성직자가 통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적용과 의미를 중점 조명하고자 논조를 전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축성생활회들은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통치제도를 입법하고 적용하며, 축성생활 신분의 은사적 성격을 교회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축성생활회의 유형과 통치 권한

교황의 답서는 제588조 제2항의 규정 가운데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라는 부분이 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답서의 내용은 ‘성좌설립성직수도회’를 다루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좌설립성직수도회만이 교회에서 통치권을 향유하기에 이 답서를 통한 조항의 개정은 성좌설립성직수도회에 관련된 것이라 여겨야 한다. 하지만 기존 이 조항의 영향으로 성좌설립성직수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회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 조항이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성직자 통치규정 개정 답서를 다루기 전에 회들의 유형과 통치 형태 전반을 다루고 잘못된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축성생활회 일반과 통치권, 성직자회와 비성직회, 성좌설립회와 교구설립회, 재속회와 사도생활단의 통치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통치권을 향유하는

3) 1917년 법전이 평신도에게 통치권 자격을 완전히 배제했다면, 새 법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평신도의 통치권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호세 카스타뇨, 『교회 헌법학 입문』, 141-144 참조.

4) 과거 수도회로 대표되던 복음적 권고의 삶의 여러 형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vita consecrata’라는 개념으로 통합된다. 이는 ‘봉헌생활’로 번역되었고 최근 축성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축성생활’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축성생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축성생활회라 하면 수도회, 재속회, 동정녀회 등을 언급하는 것이고 사도생활단은 엄밀히 축성생활회에 속하지 않지만, 함께 포함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회(會)’라고만 칭하면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통치권을 살펴보겠다.

## 2.1. 축성생활회 일반과 통치권

가톨릭교회의 통치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권력은 선재(先在)하거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부터 성립되는 것<sup>5)</sup>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권력은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신자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지금에 이른다.<sup>6)</sup>

교회의 통치권 안에서 축성생활회 장상의 통치권은 교회의 통치권이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회의 교계제도와 교회법 체계에서 규정하는 교회의 통치권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면서도 교회의 통치권과 함께 비춰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실상 교회법전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의 문헌<sup>7)</sup>에서 축성생활회의 통치권을 교계의 통치권과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의 권한이 하느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묘사<sup>8)</sup>되거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sup>9)</sup>으로 묘사된다.

교회법전에서는 “회들의 장상들과 회의들은 회원들에 대하여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권력(potestas)을 가진다”(제596조 제1항)고 일반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이 규범에서 축성생활회에 존재하는 권력이 개인으로서 장상의 권력과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으로 실

5) 박상기 외,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6 5판), 89.

6)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transmittendum)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제331조) 이러한 교황의 최고이고 완전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루이지 사바레세,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교계제도』, 29-35.

7) 교회문헌은 축성생활회 장상의 권력이 교계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묘사하며 세례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신자에게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3중 임무와 연결시킨다. 『상호관계』 13항 참조.

8) “수도자는 성령의 인도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대리자(vices)인 장상들에게 순명하며, ...” 『수도생활쇄신교령』 14항.

9) “장상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아야 하므로(히브 13,17 참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임무(munus)를 수행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위(auctoritas)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도생활쇄신교령』 14항.

현하는 회의들의 권력으로 구별되고 있다. 공의회에서 교회의 권력은 그 자체 안에 개인적 특성과 시노달리타스가 동시에 내포된 것으로 제시하였던 것<sup>10)</sup>과도 부합한다. 권력이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제한 속에 있음을 제시하는 이 규정은 회의 통치가 고유법 중에 회헌에 담겨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587조 제1항<sup>11)</sup>과 일치한다.<sup>12)</sup> 축성생활회의 장상의 권력을 회헌에 맡기는 것은 회의 은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보조성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축성생활회의 권력의 이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돋보인다. 법체계상으로 구분된 통치권과 직권자들의 권한이 축성생활회에 적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에<sup>13)</sup>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장상의 권력을 입법하는 것이 회들에게 속제로 남아있다.

보편법상 직권자에게 해당하는 많은 권한과 축성생활회 장상의 권력 관계가 불명료하기에 회헌에 규정될 필요성이 대두되기까지 이 권력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논쟁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전 법전은 이 권력을 지배권(*potestà dominativa*)으로 규정했었다.<sup>14)</sup> 심지어 이 권력이 교회권력과 상관없이 사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공법인인 축성생활회 내에서 행사된 권력이 사적인 것으로 간주 될 수 없고 단체가 공적이라면 권력은 당연히 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후 1952년 3월 26일 교황청 교회법 해석 위원회는 교회의 관할권(*potestà di giurisdizione*)에 관해 규정하는 1917년 법전 조항들이 수도회(현 교회법전으로 보면 축성생활회) 장상들의 지배권(*potestà dominativa*)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답한다.<sup>15)</sup> 이 답변은 1983년 법전 제596조 제3항에 확실히 성문화되었다. 하지만 축성생활회 장상의 권력이 이렇게 교회의 관할권에도 적용될

10) Gerosa Libero, *Canon Law*, London/New York: Continuum, 2002, 183-184.

11) 제578조 제1항은 “제578조에 규정된 준수사항 외에도 회의 통치와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합체와 양성 그리고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적 규범이 각 회의의 기본 법전 즉, 회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제596조 제1항의 입법 과정에서 회들의 장상들과 회의들의 권력은 초안 제510조에서 “회헌 결정에 따라(*iuxta determinationem Constitutionum*)”(어떤 사제) 또는 “고유법에 따라(*iuxta Ius proprium*)”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회헌에 따라(*ad normam Constitutionum*)”라는 문장이 조항 끝에 추가된다. *Relatio, complectens synthesim animadversionum ab Em. Mis atque Exc. Mis patribus Commissionis ad Novissimum schema Codicis Iuris Canonici exhibitarum, cum responsionibus a secretaria et consultoribus datis*, “Liber II, Pars III, Sectiones I-II”, *Communications*, [s. l.], v. 15(1983) 61.

13) 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이규용 옮김, 『사목연구』 46(2021, 여름), 125-130 참조.

14) 1917년 법전 제501조.

15) Velasio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Mosca, Vincenzo,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232-233.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통치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축성생활회의 장상의 권력은 본성상 교회의 권력에 속하지 않고 제596조 제1항에서 제시하듯이 다만 법에 따라 적용되는 권력이다. 회가 갖는 권위(autorità)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고려하여 행하는 한 의미상으로는 교회의 권력(potest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축성생활회 장상의 권력이 교회 통치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실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sup>16)</sup> 또 교회법은 ‘성좌설립성직수도회’만이 교회의 통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96조 제2항).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보면 제588조 제2항에서 ‘성좌설립’이라는 명칭을 빼고 성직자회의 통치를 성직자로 제한한 규정은 성직자 통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면이 있지만 실제 회들의 통치권의 적용에는 구속력이 없었으며 의미도 크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오히려 성직자에 국한된 통치 적용을 통해 형제적 삶과 은사적 삶을 사는 축성생활회원의 신분에 관한 이해를 축소하는 결과만 드러내고 있었다.

## 2.2. 성직자회와 비성직회

교회의 신분에서 ‘축성생활회원의 신분’은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을 넘어서나. 그리고 ‘축성생활회’ 역시 일반적으로는 성직자회와 평신도회의 구분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교계 조직에 상관없이 교회의 생명(vita)과 성덕(sanctitas)에 속하는 신분으로 묘사된다(제207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제588조 제1항은 다소 모호한 표현을 구사한다. ‘축성생활회’의 신분(속성)도 아니고 ‘축성생활회의 회원의 신분’도 아닌 ‘축성생활의 신분(status vitae consecratae)’이라 묘사하면서, 그것은 본성상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라고 표명하는 점에서 그러하다(제588조 제1항 참조). ‘축성

16) Ibid., 233-234. 제596조 입법 과정에서 축성생활회의 장상이 갖는 자격을 ‘권력(potestas)’보다 ‘권위(auctoritas)’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 둘이 별개의 개념이기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Relatio, complectens synthesim animadversionum ab Em. Mis atque Exc. Mis patribus Commissionis ad Novissimum schema Codicis Iuris Canonici exhibitarum, cum responsionibus a secretaria et consultoribus datis; Liber II, Pars III, Sectiones I-II. Communicationes, [s. l.], v. 15(1983), 65. 이 교회법전에서 ‘권력(potestas)’과 ‘권위(auctoritas)’이라는 단어들 모두 사용된다. 권력은 행위의 역량 혹은 자격이다. 자연적(natural)이든 육체적(physical)이든 지성적(intellectual)이든 혹은 영적이든 모든 권력은 하느님 안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권한은 어떤 윤리적 혹은 법적 권리 안에 기초를 두는 권력의 소유 혹은 사용을 의미한다. 장상들은 그들의 직무에 의해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회의 목적에 따라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John Beal P.-Coriden James A.-Green Thomas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New York: Paulist Press, 2000), 781.

생활' 자체는 보다 큰 범주를 품는다. 이 신분은 '축성생활의 형식'도 포함하여(제605조 참조) 신학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넘어서 그들 양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복음적 권고를 선서하는 새로운 신분이다. 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회' 역시 마땅히 성직자회와 평신도회의 구분을 넘어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구분하는 제588조 제2항의 입법 과정 초안 제5조 제1항에는 '축성생활회(Institutum vitae consecratae)'가 그 본성상 성직자회도 평신도회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이 초안은 '축성생활회'를 언급하면서 축성생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제588조의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나누는 구분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제588조 제1항의 마지막 입법은 '축성생활의 신분'이 본성상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나서 바로 제2항과 제3항에서 축성생활을 각각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구분하는 조항들을 입법하였다.<sup>18)</sup>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제588조 제2항의 초안 제5조 제1항이 성문화되어야 했고,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답서를 통한 조항 개정의 노력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본 연구자의 논리적 결론이다. 성직의 특성을 강조하며 설립된 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수 이기에 그 두 범주를 구분하여 입법하는 것보다 두 범주의 혼합된 형태에 관해서 묘사하는 것이 축성생활회들의 본성과 성격에 더 가까운 유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초안이 배제되고 제588조 제2항은 성직자회를 제3항은 평신도회를 규정하면서 교계 제도적 도식으로 축성생활회를 나눈다. 이 구분은 특히 교회 통치권과 연결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sup>19)</sup> 축성생활회의 형제적 삶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으로 인한 통치권의 구별과

17) 초안 제5조 제1항: "Institutum vitae consecratae, suapte natura, neque clericalia neque laicalia sunt."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7.

18) 사실 1917년 법전을 개정하면서 1983년 법전은 평신도가 통치에 협력하는 길을 열어두었지만 제129조의 입법에서 교회의 통치권의 개념 정의는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Eugenio Corecco, *Natura e struttura della "Sacra potestas"*, 1997, Piemme, 3을 Gerosa Libero, *Canon Law*, 188에서 재인용.

19) 이에 관해 안드레스 고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혼합된 형태의 축성생활회의 가능성은 천천히 성숙되고 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열망은 교회법전이 반포되고 난 후에 증가하였다....아직도 신학적, 교회론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품권과 관할권(통치권)의 관계, 평신도의 교회 통치 직무에 참여의 한계, 성품성사를 요구하지 않는 일들을 유효하게 실행하기 위해 성품성사를 요구하는 것들은 아직도 풀어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 도밍고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한영만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64.

제약이 불필요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형제적 삶의 특성상 장애로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1967년 작은 형제회는 총회를 통해 모든 회원을 ‘형제(수사)’로 간주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들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려고 하였으며 이를 승인받기 위해 수도회성에 청원하였다. 물론 당시 교회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몇 년 뒤 카푸친 수도회는 비성직회원이 지부장 대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주도록 요청했고 1974년 11월 12일 수도회성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정도였다.<sup>20)</sup>

결과적으로 교회법 제588조 제2항은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를 구분하고 전자는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제588조 제2항)로 규정하기에 이른다.<sup>21)</sup> 그런데 이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성직자의 통할을 처음부터 규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초안에 “성직자회는 설립자가 정의하거나 합법적인 전통에 의해 확인된 거룩한 성품의 행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교회 권위에 의해 그렇게 인정되는 회를 일컫는다”<sup>22)</sup>라고 하여 성직자 통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여기에 성직자의 통치가 삽입되는데 그 이유는 축성생활신학이나 축성생활의 법적 전통을 통한 도출이 아니었기에 근거가 미약하다. 즉, 비서관(*Segretario*)은 위원회에서 제2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면서 신자 단체와 관련하여 제정된 “하느님 백성에 관하여(*De Populo Dei*)” 초안 제42조를 근거로 성직수도회도 성직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

20) 이찬우 편저, 『수도자와 봉헌생활: 교회법 제573-746조(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인천: 인천가톨릭 대학교출판부, 2009), 62; 수도회성 교령, *Clericalia instituta* (1969. 11. 27): AAS 61(1969), 739-740 참조.

21) 지금 교회법 체계에서 성직자회에 관련된 조항들만 언급되고 그러한 회에 특별한 권한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즉, 성직자회에서 서원으로 이미 입적된 이들이 부제품 혹은 탁덕품에 나아감은 부제품이나 탁덕품의 지원자들 사이에 전례 예식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034조 제2항). 또한 정례 회합이든 비정례 회합이든 주교대의원회의에 성직수도회의 대의원들이 구성원이 되고(제346조 제1-2항) 제520조에 따라 교구장 주교는 성직수도회에 본당을 맡길 수 있다. 성직수도회의 장상은 병든 축성 생활회원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줄 수 있다(제911조 제1항). 교구장 주교의 수도원 설립의 동의와 함께 성직수도회는 자신의 성당을 가지고 거룩한 교역을 수행할 수 있다(제611조 3호). 성직자회의 장상은 회원의 장례식을 자기 성당 혹은 경당에서 거행할 수 있다(제1179조).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40. 이상과 같은 성직수도회들의 권한이 교회법 체계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좌설립성직회의 권한은 더 특별하다.

22) “§2 Institutum autem clericale dicitur quod ab Ecclesiae Auctoritate uti tale agnoscitur, attenta assumptione exercitii ordinis sacri a Fundatore definita vel legitima traditione comprobata.”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7.



한 것이다.<sup>23)</sup> 이 초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중에 성직자 단체의 규정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는 은사적이고 형제적 (공동)생활<sup>24)</sup>을 이루는 축성생활회와 성격이 다르다(제573조, 제602조, 제607조 참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는 목적 중심, 사도직 중심으로 공동체적 삶보다 활동과 기능이 더 강조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신자들의 단체 중에 성직자 단체를 비교하여 성직 수도회의 통치 체계를 성직자 중심으로 입법하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통치 부분을 입법하면서 수도회의 전통이나 신학적 고려를 통한 수도 생활, 사도직, 은사 등의 상호역학관계를 숙고한 것이 아니라 교계 제도적 차원만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직자회의 특수성을 지닌 회들 가운데 ‘성좌설립성직수도회’만이 교회 통치권을 갖고 ‘성좌설립성직수도회’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상급 장상들’만이 직권자들의 범주에 속한다(제134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제588조 제2항은 성좌설립이나 교구설립의 구분 없이 모든 성직자회의 통할을 성직자에게 유보함으로써 전체 법체계와 명료한 일치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석의 모호함을 남기고 있다. 사실 제129조 제1항은 교회의 통치권을 서품에 오른 이들로 유보하지만, 교구설립수도회의 총원장은 교회의 통치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직자이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좌설립성직수도회들과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들의 상급장상들’외에 교구설립성직회<sup>25)</sup>나 사도생활단 및 재속회 그리고 비성직회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축성생활회의 장상은 교회의 통치권과 상관이 없으므로 성직자여야 할 당위성이 없으며 실제적으로 성좌설립성직수도회를 제외하고 축성생활회를

23) “그리스도교신자들의 성직자 단체는 성직자의 지휘(moderamini)하에 있고 거룩한 성품의 행사를 맡으며 이것이 관할권위에 의해 인정된 단체들을 일컫는다.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 단체이다.

(Christifidelium consociationes clericales dicuntur quae sub moderamine sunt clericorum, exercitium ordinis sacri assumunt atque ut tales a competenti auctoritate agnoscuntur; secus laicales sunt).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9.

24) 축성생활회 가운데 수도회에 있어서 공동생활은 법체계상 구성 요소로 볼 때 ‘통합적 요소’에 속한다.

25) 유지 스가와라는 이 회의 내부 관할 장상들에게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맡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곧 새 신자의 성품 후보 자격심사(제1042조 3호), 신자들이 어떤 후보자의 성품 장애를 폭로하는 것(1043조),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을 가진 경우에 이미 받은 성품의 수행을 판단하는 것(제1044조 제2항 2호), 하루에 미사를 두 번 또는 세 번 거행하는 것(제905조 제2항)과 성찬 거행의 장소에 관한 사목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제905조 제2항),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법에 따라 보내야 할 미사 예물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제951조 제1항), 미사 책무를 감축하는 것(제1308조 제2항, 제1310조 제2항),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착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제1341조)이다.” 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이규용 옮김, 『사목연구』 46(2021, 여름), 127-128.

은 ‘성직자의 통치’를 규정했던 제588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있다.

결과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성직사회와 평신도회로 나누는 것은 축성생활회의 본질적인 신원과 신학이 담긴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중심으로 하는 축성생활 본연의 신원이 강조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성생활회들의 통치구조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축성생활회의 성격을 구별하는데 은사적 특성보다 교계제도 편에서의 신원 구분인 성직자와 평신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기능적인 면과 사도직의 활동적인 면이 부각 되었다는 논리적 결론이 도출된다. 성직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초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각이 드러났다. 성직사회의 특징을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렇게 인정된 (quod ab Ecclesiae Auctoritate uti tale agnoscitur)”이라는 표현으로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했던 것이 그것을 반영하는 예로 파악된다. “성직자들의 통치 아래(sub moderamine sunt clericorum)”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sup>27)</sup> 따라서 초안 제2항에 성직사회가 되는 가능성은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finis seu propositi a Fundatore intenti)’ 혹은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vi legitimae traditionis)’,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는(sub moderamine est clericorum, exercitium ordinis sacri assumit)’ 및 ‘교회 권위로부터 그렇게 인정된(tale ab Ecclesiae auctoritate agnoscitur)’이라는 4가지 필요 충족 요소가 보완되어 규정된다.<sup>28)</sup> 이 초안은 그 골자가 변경되지 않고 현행법의 제588조 제2항의 규범으로 확정된다<sup>29)</sup>.

성직사회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수회와 구속주회로<sup>30)</sup> 사실상 구속주회는 기존 수도회들의 전통을 지니면서 선교회라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축성생활회들이 그 이름에 성직을 포함하더라도 설립자의 은사와 회의 전통 및 회가 승인될 당시의

26)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38-239.

27)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9.

28) “Nomine Instituti clericalis intellegitur Institutum quod, ratione finis seu propositi a Fundatore intenti vel vi legitimae traditionis, sub moderamine est clericorum, exercitium ordinis sacri assumit et uti tale ab Ecclesiae auctoritate agnoscitur.” Ibid.

29) “Institutum clericale dicitur quod, ratione finis seu propositi a Fundatore intenti vel vi legitimae traditionis, sub moderamine est clericorum, exercitium ordinis sacri assumit et uti tale ab Ecclesiae Auctoritate agnoscitur.”(10명 찬성, 1명 반대).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9.

30) Beal P.-James A.-Thomas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New York: Paulist Press, 2000), 756 참조.

교회의 제한적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축성생활회를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나누다 보니 평신도회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마치 그리스도교 신자 입법 과정에서 평신도를 정의할 때 ‘성직자가 아닌’이라는 부정적 정의를 피할 수 없었고 이에 고심하였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sup>31)</sup> 하지만 축성생활의 신분은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라는 신학적 기초와 그 신분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구분하는 모순 속에 평신도회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평신도회를 규정하는 초안 제 15조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전 그리스도교 신자 부분에서 평신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긍정적 정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sup>32)</sup>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교회법 제588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을 포함하는 정의에 도달한다. “평신도회는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설립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이 비성직회의 입법 과정에서 통치 권력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어떤 자

31) 새 법전 입법 위원회는 평신도에 관한 신분과 규정들을 새롭게 입법하는 개혁조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많은 수고를 할애했다. Luigi Sabbarese, *I Fedeli Costituiti Popolo di Dio: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Libro II, Parte I*,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3) 54-62 참조.

32) 이러한 평신도회의 “임무(munus)”를 공동 사제적의 구체적인 행사 형태로 지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 “임무”가 설립자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실제로 회의 구조와 관련된 구성적 사실로서 설립자의 카리스마를 고려할 때 이 임무가 교계 구조에 의해 설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 외에 평신도회의 정의에 적절하고 진정으로 특징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s*, [s. l.], v. 11(1979), 60.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고민들은 축성생활회를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구분하여 법제화하려는 시도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노고였던 것이다. 비성직회를 정의하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서 교계의 인정, 고유한 카리스마, 합당한 전통 및 설립자가 확립한 규범 등이 모든 회에 유효한 요소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것은 거룩한 성품을 행사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부정적 정의의 요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위원이 다음과 같은 참신한 안을 제시한다. “평신도회는 고유한 카리스마에 유의하여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Institutum laicale appellatur quod ab Ecclesiae Auctoritate uti tale agnoscitur, attento charismate proprio)”. Ibid. 그러나 축성생활회의 총회를 다루는 입법 과정에서도 카리스마(charisma)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후 세습자산(patrimonium)으로 대체되었듯이(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s*, [s. l.], v. 12(1981), 170-171) 이 정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채택되지 않는다. 또 다른 위원들은 평신도회의 구성원이 공동 사제적의 삼중 임무에 참여하는 은사를 제안하기도 한다.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s*, [s. l.], v. 11(1979), 60.

문 위원은 평신도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회의 권력은 어느 정도는 교회적인 권력이라는, 곧 교회 권력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권력은 과거 논의되던 사적인 권력이나 지배권이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행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평신도가 교회 권력의 행사에 협력(cooperari)할 수 있는 것처럼, 비성직회의의 장상이 교회 권력에 일정한 참여가 가능한지 논의된다.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그들은 보편법과 회헌이 부여하는 교회의 권력을 향유한다(ea potestate ecclesiastica gaudent, quam eis tribuunt ius universale et Constitutiones)”라는 문안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확실히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위원은 이 권력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교회의(ecclesiastica)”라는 말없이 “그들은 ...한 권력을 향유한다(ea potestate gaudent, quam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sup>33)</sup>

교회법은 이렇듯 회들의 고유한 은사를 고려하지 않고 교구설립성직회와 일반 비성직회들의 장상 권력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축성생활회들을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만 구분하면서 제도화하였다(제588조 제2-3항 참조).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발전적으로 일부 권한들이 비성직회 총장들에게도 수여된다.<sup>34)</sup> 그리고 1990년 주교 시노드 후속 사도적 권고 『축성 생활』은 혼합회에 관해서도 논하고 있다.<sup>35)</sup> 이는 회들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은사 공동체인 회들을, 제도적 관점으로만 성직자회나 평신도회로 경직되게 바라보고 구조화하였던, 현재의 성문법 유형적 구분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서를 통한 제588조 제2항의 개정 적용 또한 회들 안에서 통치권과 연결된 제도적 경직성을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답서에

33)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306 참조.

34) 1917년 교회법전의 구속하에서는 사도좌나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되었던 것들(1917년 법전 제580조 제3항, 제583조 2호, 제554조, 533조 제1항)이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소속 회원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거나 유서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권한, 수련원을 옮길 권한, 지역 장상이 3년 임기로 세 번째 임명되는 것을 승인할 권한, 소속 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저당잡거나 임대하거나 장기 혹은 영구 임대하는 것과 부채를 계약하는 것을 허가할 권한이다. Sacra Congregazione per I Religiosi e Istituti Secolari, *Decreto Religionum Laicalium*, 31 maggio 1966, in AAS 59(1967), 362-364, n.4를 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이규용 옮김, 『사목연구』 46(2021, 여름), 129에서 재인용.

35) 『축성생활』 61항.

서 교구설립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법적 논의는 추후 있을 것이다.

### 2.3. 성좌설립회와 교구설립회

성좌설립과 교구설립은 현행법 제589조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축성생활회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면 성좌설립이라고 일컫는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않았으면 교구설립이라고 일컫는다.” 이 조항은 입법 초안과 유사하며 입법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져서 지금의 조항을 이를 만큼 축성생활회의 유형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성좌설립회는 회 내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내부 문제들에서 사도좌에 종속된다. 교구설립회의 경우 구 법전<sup>37)</sup>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자치<sup>38)</sup>를 향유한다(제586조 참조). 다만 교구설립회는 일부 문제들에 있어서 교구장의 특별 돌봄 아래 놓인다(제625조 2항; 628조 2항 2호; 637조; 638조 4항; 688조 2항; 700조 참조)<sup>39)</sup>. 그리고 회헌을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회헌의 변경을 인준하는 권한 그리고 사도좌가 관여한 것들은 제외하고 내부 권위의 권력을 넘어서고 회 전체에 관계된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도 본원 소재지 주교의 소임이다. 그러나 주교는 회가 나가 있는 교구의 다른 교구장 주교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야 한다. 본원 소재의 교구장 주교는 회헌 관면을 줄 수 있지

36) 입법 초안 제15항은 다음과 같다. “축성생활회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은 성좌설립이라고 일컫는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한 것은 교구설립이라고 일컫는다.(*Institutum vitae consecratae dicitur iuris pontificii quod a Sede Apostolica erectum aut per formale decretum approbatum est; iuris dioecesiani quod ab Episcopo dioecetano erectum, huiusmodi approbationis decretum a Sede Apostolica non est consecutum.*)”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61.

37) 1917년 법전은 교구설립수도회가 교구장 주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구설립수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교구로 진출하더라도 사도좌의 승인 혹은 장려(lode)를 얻지 못하면 교구설립으로 남고 법 규정에 따라 직권자들의 권한에 완전히 종속된다.”(제492조 제2항)

38) 회마다 정당한 자치 특히 통치의 자치가 인정된다. ‘내부 통치와 규율’은 합의체적 통치, 개별적 통치, 직책들, 공동생활, 내부생활 구조, 임회 허가, 육성방침, 회원들의 미래, 분할의 구체적 방식들, 그리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 통치의 방식과 시간표 등과 연관된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도밍고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75.

39) Beal P.-James A.-Thomas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757 참조.

만, 오직 개별적인 경우만이다. 이 조항은 어떤 규범인지와 관련하여 제한을 두지 않지만, 주교는 회현의 모든 ‘규율’ 규범은 관면할 수 있다.(제595조 제2항).<sup>40)</sup> 교구장 주교의 권한은 성좌의 권한과 중첩되기도 한다. 제590조 제1항에 따라 교구설립회도 보편교회에 속하고 본성상 회에 대한 권한이 사도좌에 있기 때문에 주교의 권한은 대리 권한이라 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법전이 교구장 주교의 교구설립회에 대한 역할을 “권한(*giurisdizione*)”이 아닌 “특별한 돌봄(*cura speci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돌봄은 관할권 행위들(*atti giurisdizionali*)로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에 보다 일반적인 용어라고 보면 된다. 이 돌봄은 무제한적 자유재량인 듯 하지만 법으로 제한된다.<sup>41)</sup>

성좌설립회는 교구설립회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다. 성좌설립성직회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상급장상들은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이다(제134조 제1항).<sup>42)</sup> 이 직권자의 자격은 법전이 직권자라고 언급할 때마다 상급 장상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을 부른다.<sup>43)</sup> 사실 사도직, 하느님 경배 그리고 영혼의 돌봄에 관해 제678조에 따른 교구장 주교에 속하는 것 외에는 회의 상급장상들은 그들 공동체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교구장 주교와 동일한 직권자이다. 그러므로 ‘소속 직권자’라 언급하는 모든 조항에서 그러한 회의 회원들의 고유 상급장상은 직권자에 해당하지만 보편법 조항들에 언급된 직권자가 갖는 모든 권한을 이들도 갖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보편 교회 법전에 언급된 직권자는 보통 교구 직권자(*ordinario del luogo*)만을 일컫기 때문이다.<sup>44)</sup>

40)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54.

41) Ibid., 252-253 참조.

42) 축성생활회의 직권자들과 교구직권자를 구분하여 각각 할당된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축성생활회 직권자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a)매년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제958조 제2항), b)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의 보수를 허가하는 것(제1189조), c)어떤 거룩한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주는 것(제1210조), d)한 장소를 경당으로 지정하는 것(제1223조).(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123)과 형벌 제정 권한(한영만, 『가톨릭교회 형법』,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48).

43) 데빠올리스는 이에 관해 다음을 참조하도록 한다. B. Esposito, “Alcune riflessioni sul superiore maggiore in quanto ordinario e sulla valenza ecclesiologica e canonica della qualifica”, in *Ang*, 78(2001), 669-731.

44) 권한의 예는 다음과 같다. a)제87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을 관면할 권한; b)세속 직무를 맡는 것에 대해 허가할 권한(제285조 제4항); c)본당신부 혹은 보좌신부(*vicario parrocchiale*)가 집전한 것 외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미사예물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제951조 제1항); d)규칙에 벗어나는 것과 장애를 관면할 권한(제1047조 제4항); e)성당을 제외한 거룩한 장소를 축복하는 권한(제1207조); f)경당을 설치할 허가를 줄 권한(제1224조); g)재산관리에 관한 훈령을 발령하고 감독할 권한(제1276조); h)형

이상의 보편법 체계를 고려하면서 성좌설립회와 교구설립회의 장상들은 보편법과 고유법 특히 회헌에 따른 권력의 범위와 제한을 통해 회의 내부와 회원들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성좌설립은 교구설립보다 더 큰 통치의 자치를 향유하는데, 고유 입법을 통해 더 추가될 수 있다.<sup>45)</sup>

## 2.4. 재속회와 사도생활단

재속회와 사도생활단의 장상은 성좌설립성직회일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통치권자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성직재속회에는 자신의 성직자를 입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와 구성원이 모두 교구에 입적되는 회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도회성은 성직재속회의 유형은 모든 회원이 교구에 입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장상들이 회원들에 대한 교회 통치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성직자를 입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성좌설립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 공동 생활단(*Società di vita comune*)이라는 명칭으로 다뤄진 사도생활단 가운데서도 어떤 단은 자체 입적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성좌설립재속회도 입적 권한 없이 교해성사의 권한과 서원의 관면 등 내부의 어떤 관할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sup>46)</sup>

이러한 논의는 축성생활회의 통치권에 관한 입법에서 통치의 권력이 모든 ‘성좌설립성

---

별을 설정하고(제1319조) 적용하며(제1341조) 이를 사면하는(제1355조 이하) 권한; i) 제1717조 이하의 규범에 따라 형벌절차를 시작할 권한.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41.

45) 유지 스가와라는 성좌설립 비성직회의 상급 장상들이 내부 통치의 정당한 자치(제586조 제1항)가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법인이 직권자에게 맡기는 권한을 이행하기에 너무 번거롭기에 성좌설립 비성직수도회의 내부 장상이 직권자가 아님에도 그들에게 맡겨질 수 있는 권한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a) 재산 관리자들이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권자 앞에서 맹세(제1283조 1호); b) 재산 관리자는 지출하고 남은 돈을 투자할 때 동의를 얻는 것(제1284조 제2항 6호); c) 재산의 관리(제1276조 제1항); d) 연례 결산서 제출(제1287조 제1항); e) 비통상적 재산관리 행위(제1281조 제1항); f) 신탁 재산에 대한 보고(제1302조 제1항); g) 법인이 기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허가(제1304조 제1항); h)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금전과 동산을 예치할 곳에 대한 승인(제1305조); i) 국가 법정에 공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제1288조); j) 형벌을 적용하는 것(제1348조)과 사면하는 것(제1356조 제1항 2호) 등이다. 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128-130.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권한 규정과 적용에 차이가 있거나 애매한 것들은 직권자가 아닌 축성생활회 장상들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 권위에 허가를 받고 고유법으로 입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46)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8.

직자(축성생활)회’에 부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수도회’에만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문제와 함께 다시 전개된다. “회헌 규정에 따라(ad normam Constitutionum)”라고 여지를 두고 일반적으로만 규정하자는 의견과 “고유법 규범에 따라(ad normal proprii iuris)” 통치권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모든 성좌설립성직회와 재속회에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 입법 과정에서 수렴된 내용은 재속회에 관한 특별 부분에서, 입적 권한을 갖는 성좌설립성직재속회여야만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성좌설립재속회에 관해서는 통치권이 입적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비례한다고 언급하는 본문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47)</sup> 마침내 이러한 논의들은 다른 조항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입법되지 않았기에 거부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83년 법전 제134조의 입법 초안 제131조에 따르면 재속회와 성직자들의 단체(consociationum clericorum)는 입적 권한이 있더라도 정규통치권자(Ordinarii Moderatores)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제237조 제3항, 제641조, 제662조). 적어도 초안 제691조 제2항에 따라 성직자들을 자기 권한으로 입적시키는 성직자 단체 통치자들은 그러한 권력이 단체의 통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통치의 권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려 하였으며 직권자들(Ordinaries)로 간주하려 하였다. 그리고 사도좌의 허가로 성직자들을 입적할 수 있는 성좌설립재속회의 총회장도 마찬가지로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성좌설립성직수도회 총원장과 동일한 권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sup>48)</sup>

결국 ‘성좌설립성직수도회’만 교회의 통치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제596조 제2항 참조) 재속회와 사도생활단은 성좌설립이고 성직자회이며 성직자를 입적시킬 수 있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통치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회와 단들의 장상들은 그들을 위해 규정된 보편법과 고유법의 권력만을 갖는다.

## 2.5. 성좌설립성직수도회

‘성좌설립성직수도회’는 앞서 살펴본 성좌설립과 교구설립 중에 성좌설립에 해당하고

47)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307 참조.

48) Liber I, De Normis Generalibus. *Communicationes*, [s. l.], v. 14(1982), 150 참조.



성직자회와 비성직회 중에 성직자회에 해당한다. 이 특징은 제588조 제2항의 성직자회에 해당하는 특성 즉, 설립자의 은사나 회의 세습자산 및 교회 권위의 인정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제578조, 제588조 제2항 참조).

축성생활회 가운데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이 성좌설립성직수도회만이 향유하는 권력이다. 이는 성품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원천을 갖고 있다<sup>49)</sup>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좌설립성직수도회에 통치권이 성직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법 위원회가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개별적인 경우 교회 최고 권위가 허가하면(*singulis pro causis auctoritas Ecclesiae suprema ipsis concedit*)” 평신도도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답변을 전제로 성직자 회가 “성직자들의 통치 아래(*quae sub moderamine sunt clericorum*)”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통해 입법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sup>50)</sup> 즉, 성좌설립성직회가 성직자의 통치를 규정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조항이 비성직 회원의 통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입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비성직 회원도 ‘축성생활과 사도생활단 성’의 허가로 통치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미 이 조항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입법과정에서는 이 회가 꼭 성직자가 통치해야 하는 회라는 당위성을 고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후 다른 조항인 제588조 제2항을 통해 채색된 것이다.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는 새 법전에서 회들에게 주어진 자치가 가장 크게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51)</sup> 여기서 “성좌설립성직수도회에서는 그들이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법정에서나 교회의 통치권도 갖는다”(제596조 제2항)<sup>52)</sup>고 규정하는데, 구체적 통치 주체는 제1항과 연결하여 읽으면 ‘장상’과 ‘총회’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개인으로서

49) 도밍고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80.

50)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59.

51)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22-223.

52) 이 조항의 1983년 전안에 이미 성좌설립성직수도회들에서는 외적 법정 및 내적 법정 모두에 대한 교회 통치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었다. *Relatio, complectens syntheses animadversionum ab Em. Mis atque Exc. Mis patribus Commissionis ad Novissimum schema Codicis Iuris Canonici exhibitarum, cum responsionibus a secretaria et consultoribus datis; Liber II, Pars III, Sectiones I-II. Communicationes*, [s. l.], v. 15(1983), 64.

장상은 제588조 제2항과 제129조 제1항 및 제274조 제1항에 맞춰 성직자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물론 본고에서 다루는 이번 교황의 답서로 비성직 회원에게도 통치권의 길이 열렸다). 그 외에 합의체로서 ‘회의’들도 통치권을 갖는데, 이 회의를 통해 비성직 회원도 통치권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회원들이 성직자들과 비성직 회원들로 구성되고 이 두 신분 모두 총회에 참여하여 회의라는 통치권의 주체를 통해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비성직 회원들이 축성생활 신분이지 평신도와 같은 신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29조 제2항에 따른 “평신도들이 이 권력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치권에 협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sup>53)</sup> 중요한 것은 회의들도 통치권을 갖고 있으며 성직자가 아닌 이들도 교회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이 성좌설립성직수도회에서 본래부터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 축성생활회가 교회의 교계 구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직자를 기준으로 제한된 교계 통치권의 구도 밖에서, 비성직 수도자의 통치권 참여가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축성생활회 가운데 교계적 성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성좌설립성직회의 범주는 교구나 지역 직권자들과 같은 교계적 실체의 기능이 아니라 그들 고유한 성직적 성격의 기능, 은사의 기능 안에서 갖는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상급장상들이 통치권이 있고 직권자이지만(제134조), 교회 안에서 집행권만의 통치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모든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 원칙으로 축성생활회 장상들은 법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만 갖는다.<sup>54)</sup> 입법자는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 그리고 교구장 주교 사이를 구별하면서 세 가지 수준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성좌설립성직회의 상급 장상은 직권자이지만 입법자가 보편법이나 개별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갖는다. 보통 입법자가 회헌을 승인하면서 그 안에 장상의 권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sup>55)</sup> 일반적으로 교회법 체계로부터 성직자회의의 장상들에게 부여된 복

53) 물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비성직 수도자를 평신도와 같은 신분으로 오해하도록 단순하게 주석하기도 하지만 축성생활회원은 신분상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교회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격을 성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비성직 수도자를 평신도처럼 언급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

54)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140-141.

55) Ibid., 141. 법전은 성좌설립성직수도회가 법전 안에서 특별한 권한을 갖는 특정 사례들을 적지 않게 나열한다. 그들 중에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제557조 제2항에 따라 수도회 장상은 회의 성당에(성직)축성생활회원을 담임으로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b) 상급 장상은 고유 소속자에게 부제와 사

잡한 권한을 고려하여 성직자회의 통치가 성직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유리한 이유도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권한과 교계제도의 신학에 확실히 뿌리를 두고 있고 교회법 체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별히 성좌설립이면서 특히나 성직수도회의 상급장상이라면 교회법 체계와 연관된 성품권 혹은 교회 통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직무행사에 유리하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직축성생활회원에게 통치권이 배제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보았고 이번 교황의 답서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내적 법정의 통치가 성품에 의한 통치권으로 오해되면 비성직회원들이 이 통치권에 제한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sup>57)</sup>

교회의 통치권은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이라는 구분 외에도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제135조 참조) 장상들은 원칙적으로 이 세 종류의 권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일부만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부 통치기구는 입법 또는 사법의 권력만 가지며 지역 장상들은 일반적으로 집행권만 가진다. 따라서 집행권은 장상들에게 일반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보편법과 고유법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제한과 설명이 있을 수 있다.<sup>58)</sup>

---

제 수품 허가서를 줄 수 있다.(제1019조 제1항); c)상급장상은 제1302조 제3항에 따라 신탁 재산의 직권자이다; d)총원장은 유증과 미사 책무의 감축에 대한 권한이 있다.(제1308조 제4항); e)총원장은 제68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기서원자에게 회를 떠날 은사를 줄 수 있다; f)총원장에 관한 사건은 로마 공소법원에 유보된다(제1405조 제3항 2호); g)제1427조 제1-2항에 따라 관구와 총원의 상급장상은 자기 수도회 내의 쟁송을 판결한다; h)장상들은 직무상(제968조 제2항) 자기 회원의 고백을 들을 권한을 갖고 다른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969조 제2항). Ibid., 241-242.

56) Ibid.

57) 이러한 권력의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의 차이는 법적 효과들에 있다. 내적 법정에서 통치 행위는 유효하고 효력이 있지만, 외적 법정에서 효과가 없다. 내적 법정은 단순히 그 안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그 안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장소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적 법정에서 통치 행위의 본질도 분명히 밝혀진다.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특정 한도 내에서 고유한 법적 효과들이 발생하는 관할권(*potestà di giurisdizione*)의 행위이다.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장상들은 제1355조의 규정에 따라 내적 법정에서 형벌의 사면의 예와 같이 혹은 고유법과 보편법에 따라 내적법정에서 역시 관면을 수여하면서 내적 법정에서도 그러한 권한을 갖는다. 법전은 내적 법정에서 통치권에 관해 말할 때 죄를 사면하는 권한의 행사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권력은 오늘날 다는 교회 통치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죄의 사면은 거룩한 성품을 통해 사제가 소유한 권한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승인하는 효력이 있는 성품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그 유효한 행사를 위해 특별권한이 요구될지라도 말이다. 제1357조에 기초하여 긴급한 경우처럼 사제가 성사적 내적 법정에서 교회법적 형벌을 사면할 때 죄의 사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 체계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내적 법정에서의 관할권(*giurisdizione*)에 의한 것이다. 장상들이 갖는 내적 법정의 권력이 무엇인지는 보편법과 고유법에 달려있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48-249.

58) Ibid., 247.

한편 회의가 갖는 권력은 주로 입법권에 있지만,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총회는 통치권 혹은 사법권도 행사한다(제596조 제2항). 규범을 발행하는 그들의 권한은 진정한 입법권이며 제29조에 따라 본 의미의 법률들이며 관련 조항들로부터 규제되는 일반 교령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권한 외에도 총회는 보편법과 회헌에 따라, 입법자에 의해 확장된(제596조 제3항) 집행권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 3. 제588조 제2항의 개정의 적용과 의미

#### 3.1. 제588조 제2항을 개정하는 답서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2월 11일 답화에서 추기경과 대주교 비서관 서명으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 라틴 교회의 성좌설립성직자 축성생활회와 성좌설립 사도생활단에서 상급 장상 직무를 비성직회원(il sodale non chierico)에게 수여하는 권한을, 조건을 지키면서 부여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제134조 제1항을 보존하면서 제588조 제2항과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고유법 개정을 이 성성에 의존하도록 허가하였다. 이에 관한 규정<sup>60)</sup>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나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비성직 회원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원장에 의해 지역 장상으로 임명된다.
제2항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 또는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비성직 회원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청원으로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성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후 상급장상으로 임명된다.
제3항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 혹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에서 고유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선출된 비성직 회원 총원장 혹은 상급장상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의 서면 허가를 통한 추인이 필요하다.
제4항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들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심사하고 총원장이나 총회에 의해 제출된 동기 이유를 심사할 권리는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에 유보된다.

59) 물론 다른 회들의 총회에서 역시, 제31-33조가 적용되는 일반 집행교령을 발행할 수 있다. Filippo Iannone, *IL CAPITULO GENERALE: 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103.

60)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Rescritto del Santo Padre Francesco circa la deroga al can. 588 §2 CIC', 18. 05. 2022 (검색일: 2022년 8월 8일.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5/18/0371/00782.html>)

이상과 같은 답서 내용은 법제도의 개정에 관한 것이기에 행정적 절차 이상의 것이므로 교황청 일부 성성이 주관하지 않고, 교회 최고 권위인 교황의 입법권으로 부여한 것이 아주 적절한 절차로 보인다. 물론 교황청은 최고 권위로 활동하지만, 교황의 권위 아래 행정권 안에서만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 교회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도를 교회 법 체계에 도입하는 경우는 최고 입법권자인 교황의 개입이 필요하다.<sup>61)</sup> 새로 입법된 보편법은 사도와 관보에 발행된 날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면 그러하지 않다(제8조 참조). 이를 근거로 보면 해당 답서를 통한 조항 개정 적용은 답서가 발표된 그 날부터 발효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답서가 발표된 2022년 5월 18일 당일이 효력 발효일이 된다.

## 3.2. 답서의 적용

답서에 담긴 조항의 개정 적용은 비성직 회원의 장상 지명 가능성과 연결되기에 성좌설립이건 구교설립이건 성직과 비성직으로 구성되지 않는 여성 축성생활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 3.2.1. 성좌설립 성직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답서는 보편법 제588조 제2항을 개정 적용하고 있다.<sup>62)</sup> 답서는 제588조 제2항을 개정

61)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181-182 참조.

62) 신법(*lex posterior*)은 구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의 역량을 명백한 형식, 직접적 반대, 모든 내용의 재정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명백한 언급’은 신법이 구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제6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입법자는 폐지와 개정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형식은 입법자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없애준다. ‘직접적 반대’는 입법자가 이전 법률과 반대되는 법률을 발표할 때 발생한다. 이 반대는 신법이 이전의 것과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고 동일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준수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Julio García Martín,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Venezia: Marcianum press, 2015(6ed)), 158-159. 구법이 신법 전체와 반대되면 구법은 폐지되고, 부분적으로 반대되면 구법이 개정된다. ‘모든 내용의 재정리’는 구법의 모든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입법권자가 법률의 내용 전체를 다시 다루어 새로운 규범을 반포하는 경우다(제6조 제1항 4°). 그래서 구법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입법 과정은 먼저의 규범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이 효력을 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구법은 완전히 폐지되거나, 정리된 부분만큼 개정된다. Ibid., 160; V. De Paolis-Andrea D’Auria, 『일반규범』,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60.

적용하지만 제134조 제1항은 보존한다. 제134조 제1항은 앞서 다른 교회의 통치권을 갖는 직권자들을 나열한다. 교회의 정규 통치권자인 직권자에 성좌설립 성직수도회들과 성좌설립 성직사도생활단의 상급 장상들도 해당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pro suis sodalibus*)”라는 단서가 붙는다(제134조 제1항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법전 조항들에서 직권자들이 누리는 많은 권리가 있지만, 이 회들의 상급 장상들이 직권자로서 그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성좌설립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과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 혹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 가운데 답서는 후자에 해당한다. 답서 제1항의 경우는 일반적 관행으로 많은 축성생활회가 고유법으로 유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가 필요 없다. 제2항의 경우는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나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상급장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청원으로 축성생활회 및 사도생활단 성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후 비성직 회원도 상급장상으로 임명되는 규정이다. 제2항의 경우는 제588조 제2항의 영향으로 상급장상에 성직자만 가능했던 길을 비성직 회원에게도 열어주는 규정이다.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청원 후 성성의 서면 허가를 받고 비성직 회원도 상급장상에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3항은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 혹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총원장을 포함한 상급장상의 선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고유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선출된 비성직 회원 총원장 혹은 상급장상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의 서면 허가를 통한 추인으로 직무 획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회의 통치권 입법 과정 초안에 담겨있던 내용이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다<sup>63)</sup>

한편 답서의 제2항과 제3항을 이 회들이 입법하는 경우 답서 제4항에 따라 그 동기와 개별적 경우를 평가하는 것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에 유보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출로 지명이 이루어지는 때에 추인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제166조 제2항, 제178조, 제625조 제2항, 제3항).<sup>64)</sup>

답서는 제625조 제3항에 따라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답서에 구속되는 성좌설립성직축성생활회 혹은 성좌설립성직사도생활단의 당선자는 당선을 수락한 날로

63) Coetus Studiorum, “De Normis generalibus”, Series Altera. Sessio III *Communicationes* v. 23(1991), 219-220 참조.

64) 교구설립회는 총원장 선거에서 추인 대신에 본원 소재지 주교의 주재를 규정하고 있다(제623조 제2항)

부터 8일의 유용 기간 내에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관할권자(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의 서면 허가를 통한 추인을 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자기가 정당한 장으로 추인 청구를 지지당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제179조 제1항, 제3항). 또한 “당선자는 추인을 통고받기 전에는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직무의 관리에 개입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그가 행한 행위는 무효다”(제179조 제4항).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선자가 추인을 통고받으면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제179조 제5항).

### 3.2.2. 교구설립성직회의 답서 적용문제

제588조 제2항의 개정 적용을 담은 교황의 답서에 교구설립회들에 관한 언급이 없다. 기존 교구설립 가운데 특별히 성직자회들은 제588조 제2항에 따라 총원장을 성직자로 제한하였다.<sup>65)</sup> 그렇다면 이 보편법 규정이 개정 적용되는 동시에 이 조항을 근거로 입법한 교구설립성직회들의 총원장 피선거권을 성직자로 한정하는 고유법 조항을 자연스럽게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법률의 폐지 혹은 개정을 논하는 일반규범의 규정을 고찰해 봐야 한다. 교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직접 반대되거나 또는 먼저의 법률의 내용 전체를 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결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률 폐지 혹은 개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중의 법률이 명시적으로 폐지, 개정, 반대, 정리하는 경우이다. 이를 명시적 외재적(ab extrinseco) 폐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황의 답서는 보편법 제588조 제2항의 개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입법된 고유법의 폐지나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위의 제20조에 따르면 보편법은 고유법을 폐지(개정)하지 않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588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회들의 고유법은 제588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여기서 연구자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내재적 중지이고 다른 하나

65)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회헌과 규칙』, 2016, 제163조 참조.

는 총회에서 정식 절차를 통한 폐지(개정)이다. 먼저 내재적 중지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법이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목적이나 존재 이유가 없거나, 법이 규제하는 사회적 상황이 바뀌어 법의 준수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심지어 유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다.<sup>66)</sup> 사실 학자들은 입법권자의 개입 없이도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는 자동폐지(내재적인, *ab intrinseco*)를 언급한다.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법률이 부당한 것으로 바뀌거나 교회법적 공평이나 복음적 요청, 즉 하느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영혼의 구원에 힘써야 하는 교회의 본성과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법률의 내재적 혹은 외부적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법률 자체의 의미도 사라지고 법적 강제성도 잃는다. 다시 말해 법률은 유용성을 잃고 손해와 방해가 된다. 이럴 때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와 입법 의지는 자체적으로 사라진다. 이 궁극적 기준은 복음적 가치와 교회의 본성에 있다.<sup>67)</sup> 이런 관점에서 교구설립성직회들이 이 보편법의 구속 아래 총원장의 피선거권을 성직자로 한정할 때, 위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재적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폐지가 가능한 쪽으로 가설을 펼쳐보면 교황이 보편법 제588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성직자의 통할’이라는 문장을 암묵적으로 무효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교회 최고 권위가 이 문장의 가치를 무효한 것이라 평가하고 개정 적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중요해 보인다. 사실 공의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별하는 교계적 교회관을 탈피하고 있다. 복음적 가치나 신학적 가치에서 성직주의로 향하는 이분법적 신분 구도는 축성생활신학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구설립성직회들의 이 조항 관련 고유법을 내재적 폐지로 유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편법에 구속되어 규정된 고유법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교구설립회의 총원장이 본원 소재지 교구장에게 조항 폐지의 승인을 받고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제20조를 넓게 해석하여 고유법을 내재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해석을 통한 고유법의 폐지가 누구의 권리도 제한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제18조 참조). 뿐만아니라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바로 비성직 회원이 총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총원장으로 비성직 회원을 선출할지 여부는 총회에서 회원들이나 총회 위원들의 투표에 달려있기에 이 조항

66) García martin,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157.

67) De Paolis-D'Auria, 『일반규범』, 161.



폐지 여부를 총회에서 다루는 절차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내재적 폐지로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피선거권자를 결정하도록 열어두면서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당한 결론에 가깝다. 통상 회헌 개정(출석인원 2/3)과 총원장 선출(출석인원 과반)에 필요한 득표수는 차이가 있으나 총회위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기에 회헌 개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내재적 폐지로 총회에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가설은 내재적 폐지(개정)의 정당성이 미약하기에 확실한 폐지(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법률과 다른 법률을 제정할 능력은 이전 법률을 제정할 능력과 같은 주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기준<sup>68)</sup>에 근거한다. 이 기준과 함께 회헌 제정이나 개정은 그것을 입법했던 총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후에 본원 소재지 교구장의 허가를 받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제587조 제2항). 사실 내재적 폐지는 일반적인 절차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내재적 폐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의 기준은 수치로 계산되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것이 아니며 내재적 폐지 자체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 근거가 약하다면 되도록 적용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암묵적 원칙도 명시적 원칙에서 도출되어야 하는데, 보편법의 폐지(개정)는 다른 보편법에 의해 행해지고, 개별법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 폐지(개정)되며, 특별법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폐지(개정)되기 때문이다.<sup>69)</sup>

사실 보편법은 개별법과 완전히 다르다. 보편법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다루는 문제를 언급하며, 개별법은 한 영역에서 구체화 된 이익과 특별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관해 다룬다. 개별법은 보통 보편법의 한계 내에서 발전하며 다른 입법자로부터 도출된다. 그 이유는 보편법 입법자가 개별법 입법자를 대신하지 않기 때문이다.<sup>70)</sup>

본고에서 다루는 보편법 폐지(개정)와 고유법의 관계는 보편법 조항이 고유법과 서로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편법 개정과 이를 근거로 설정되었던 고유법이 힘을 잃는 정도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고유법 폐지를 고려하는 문제이다.<sup>71)</sup> 따라서 내재적 폐지

68) García martin,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158.

69) Ibid., 160-161.

70) Ibid., 161.

71) 한편 보편법이 폐지(개정)되면서 고유법도 폐지(개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회법 제21조는 폐지의 의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기존의 법률의 폐지가 의문 중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나중의 법률들을 먼저의 법률들에 연관시키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화시켜야

를 따르기에는 그 근거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가설을 고려하여 교구설립성직회들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재적 폐지를 고려하는 것은 공의회회 정신(『교회헌장』 32항, 『사목헌장』 29항)과 축성생활 신학(『수도생활쇄신교령』 10항, 15항) 및 교황의 입장에 비춰서 합당해 보이고 절차상의 법실증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방법은 법적 절차를 절대시하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관련 회헌 규정을 제정한 총회를 통해 총회 위원의 2/3의 찬성을 얻어 회헌 규정을 폐지(개정)하는 절차를 밟고<sup>72)</sup> 총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의 동의하에(제587조 제2항) 법 규정 폐지(개정)를 공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이 보편법의 개정의 의미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절차에 들어간다면 율법주의나 법실증주의의 부정적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즉, 특별히 회의 은사가 달리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편법 개정에 맞춰 고유법이 폐지(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축성생활회의 특성이나 이 답서에 관한 깊은 이해 없이 기존 고유법을 고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회는 제588조 제2항에 근거한 조항에 관해 폐지(개정) 여부를 총회에 넘길지 내재적 폐지(개정)로 다룰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교황 답서에 의하면 성좌설립회들에서 비성직 회원이 총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교회의 최고 권위가 권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교구설립회도 교구장 주교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밟는 규정을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답서의 언급이 없으므로 입법 과정에 제시된 내용에서 비서품자에게 통치권 수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여<sup>73)</sup> 회헌에 적절하게 규정하고 회헌은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구설립회의 총원장은 교회의 통치권과 무관하기에 비성직 회원의 선출에 이러한

---

한다.” 그런데 이 폐지의 의문은 신법에 의한 구법의 폐지 여부에 의문이 남는 경우와 그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다룬다. 이 의심은 명확한 법률에서 비롯될 수 없기 때문에 폐지와 개정 둘 다 정확한 용어로 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신법에서 오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에 대한 의문(제14조)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에 의해 이루어진 폐지에 관한 의문의 문제이다. 폐지의 의문은 의심스럽게 폐지된 구법과 의심스럽게 폐지되는 신법 모두에 관한 것이다. García Martín,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162. 이상과 같이 제21조가 다루는 폐지의 의문은 보편법 폐지에 따른 고유법이 폐지가 의문인지 아닌지에 관한 본고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에 제21조를 적용시킬 수 없다. 그리고 답서에 교구설립회에 관해서는 폐지(개정) 언급이 없으므로 폐지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추정되지 않기에 따로 폐지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2) Jean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Ancora, Milano, 1989), 92-93 참조.

73) Liber I, De Normis Generalibus. *Communicationes*, [s. l.], v. 14(1982). 150.

권력 수여의 절차가 없어도 문제는 없고, 또한 기존 비성직회들에서 비성직 회원이 자연스럽게 통치하고 있는 것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이 교구설립성직회의 자유재량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3. 답서의 의미

교황의 답서는 제588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비성직 회원이 축성생활회의 통치권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공의회 정신의 뒤늦은 실현이고 축성생활의 성격과 그 회원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게 되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축성생활회는 교회의 교계 제도에 속하지 않는 은사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치권 역시 교계 공동체들과 달리 성품에 오르지 않은 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성품에 국한된 직무들 즉, 예를 들면 성사를 집전하여야 하는 직무들(고해사제, 수녀원 담당사제)은 제외하고 그외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수도생활쇄신교령』 15항 참조). 이렇게 회원 모두가 평등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더욱 강한 결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회의 삶과 통치에 시노달리타스가 구현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이기도 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축성생활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형제적 (공동)생활’, ‘은사적 공동체’, ‘공동체의 고유법’의 차원이다.

#### 3.3.1. 형제적 (공동)생활

축성생활성소를 갖고 회에 입회할 때에는 장상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입회하는 회원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수도생활 중에 장상의 영향과 그 안에서 갖는 수도생활의 역학관계를 체험하면서 비성직 회원의 경우 성직자에게만 열려있는 장상에 대한 제도에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수도생활의 더 근본이 되는 통합적 요소인 형제적 (공동)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모두가 가족과 같은 형제적 (공동)생활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불평등과 차별적 권리의 제한 때문이다(제602조 참조). 물론 성직자 중심의 통치권 제한이 반드시 불평등한 특권으로 나타나거나 지배와 피지배 권력 구조를 통해 형제적 (공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장상 직무는 특히나 교회에서 타인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아니라 봉사

의 모델로 복음적 차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답서를 통해 모든 회원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형제적 (공동)생활을 이어가는 공동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형제적 (공동)생활인 축성생활의 뿌리가 되는 교회 문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더 확신하게 된다.<sup>74)</sup>

교회가 삼위일체의 친교인 것처럼 축성 생활도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활기를 주는 친교 차원을 표현한다. 교회의 자녀들이 성령에 의해 태어나고 따라서 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로 인식하는 것처럼, 축성생활 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공통 성소에 기초하고 같은 회에 속한 새로운 형제애로 탄생한다. “형제적 생활은 특별한 하나의 가족처럼 그리스도 안에 회원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 여기서 논해지는 형제적 생활은 같은 회에 공동으로 속해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 근원은 공동의 성소 즉,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는데 있다.<sup>75)</sup>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축성생활회가 형제 생활과 가족공동체 같은 구성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기도 하며 장상을 봉사자나 아버지처럼 상징화하기도 한다.<sup>76)</sup> 형제적 가족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회의 통치는 그야말로 가정에서 봉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길에 차별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공동체 특성을 실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제적 (공동)생활의 차원에서 제588조 제2항의 개정은 의미가 깊다.

### 3.3.2. 은사적 공동체

공의회는 각 회의 고유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여러 활동과 모범들이 이 세상에 다양하게 현존하고 지속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74) “많은 신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았던 초대 교회를 본받아(사도 4,32 참조), 복음의 가르침과 거룩한 전례 특히 성찬례로 힘을 얻고 똑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친교를 이루는 공동생활을 보존하여야 한다(사도 2,42 참조). 축성생활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로마 12,10 참조), 서로 남의 짐을 저 주어야 한다(갈라 6,2 참조). 성령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셨으므로(로마 5,5 참조), 수도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가족이며 거기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마태 18,20 참조).” 『수도생활새신교령』 15항. 그 밖에도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거룩한 교회』 II, 25-29; 『복음의 증거』 26항, 32항, 34항, 39항 41항.

75)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84.

76) 작은형제회, 『작은형제들의 수도규칙 회헌 총규정』, 2015, 8장 참조.

“교회는 축성생활회원들을 통하여, 때로는 산에서 관상하시고, 때로는 군중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회개시키시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교회헌장』 46항)

교회가 바라보는 축성생활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현존하게 하는 은사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통치구조는 교계제도 내의 단체들처럼 획일적일 필요 없이 각 회의 은사에 따라 고유한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는 교계제도와 하느님 백성인 교회 자체를 구별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새로운 교회관<sup>77)</sup> 안에서 축성생활회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해는 축성생활회를 교계 제도의 틀 안에서 경직되게 하지 않고 교회라는 더 커다란 범주 안에서 풍요롭게 하며 고유하고 다양한 모습을 이루게 한다.<sup>78)</sup>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은, 교회의 교계 구조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의 생명과 성덕에 속한다”(교회헌장 44항)고 교회가 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회를 인가하고 설립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교계이기에 그렇게 설립된 회의 장상들의 권위도 교계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좌설립성직수도회 외에는 교계의 통치권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서 오는 통치권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더 자유롭게 열려있어야 한다.<sup>79)</sup> 이러한 은사적 공동체의 통치를 교계제도의 다른 공동체와 같이 성품에 오른 이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sup>80)</sup> 그리고 설립 당시 교계제도가 설립자의 은사를 고려하지 않고 교계에 예속시키면서 성직

77) 서명옥, 「‘하느님 백성’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187(2014, 겨울), 150-154 참조.

78) 성령께서 설립자를 통해 주신 풍요로운 은사는 회들을 교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도직으로 풍요롭게 하며 성직자회와 평신도회로 구분하는 단순화를 넘어서게 한다. 이에 관해 교회 문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도직은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받아 교회가 인준하고 온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되어 온 여러분의 설립자들의 특별한 은총에서 태어납니다. 그 은총은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교회와 세상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왔으며, 교회 생활과 사도직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소인 수도 공동체 생활 안에서 확장되고 강화되어왔습니다.” 『구원의 은총(Redemptionis Donum)』 15항. “각 단체가 특수한 성격과 임무를 갖는 것은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설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목적과 건전한 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각 단체의 세습 자산이다.” 『수도생활쇄신 교령』 2항; 『거룩한 교회』 II 16항 참조.

79) 『상호관계』 13항 참조.

80) “이러한 신분은, 교회의 신직이며 교계적인 구조를 헤아려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 자기 방식으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교회 헌장』 43항.

사회로 회의 성격을 채색한 회가 있다면 새롭게 회의 은사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과거 이러한 경향을 돌아보며 축성생활회들이 새롭게 은사를 식별하도록 권고하였다.<sup>81)</sup> 이러한 은사와 회의 성격을 고려하며 장상의 피선거권 자격도 회마다 고유하게 가질 수 있다.

하나의회는 교회에서 설립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법인이 되기에 교회 권위와의 만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설립자를 통해 회를 탄생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는 그 구성원들과 이루는 자율성을 통해 그 회의 생성과 삶의 지속에 토대이기에 은사에 대한 교회 권위의 개입은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sup>82)</sup> 그 개입은 회의 삶과 구조를 결정짓는 통치 부분의 개입이 아니라 회에서 하느님의 은사가 교회와 일치에 기여하고 친교를 돕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정도면 족하다.<sup>83)</sup> 은사를 토대로 하는 회의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기준은 성직자가 주도하는 교계의 활동에 있기보다 수도자 개인의 내적 인간을 양성하여 성화하는 것<sup>84)</sup>과 교회의 목적에 관계된 다양한 사도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회 안에서 회의 은사를 통한 영적 사도직적 필요로움은 교계에 직접적 예측보다 다른 형태로 교계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법전은 축성생활회에 관한 고유한 성격을 개별 조항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축성생활의 독특한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것이 난해했을 것이다. 은사 공동체의 다양성을 교계제도로 포함하기 위한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는 은사적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특별히 성직자회에서 성직자의 통치를 규정하는 제588조 제2항에 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 문제로 회들이 교황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제도화 과정은 은사의 많은 요소를 잠재운다. 수도회법 입법 과정에서 은사(carisma)라는 단어의 사용이 최종 결정에서 기각되고 대신 ‘세습자산(patrimonium)’으로

81) “공의회는 각 회가 가능하다면 착수해야 하는 현재진행 중인 쇄신의 원리들 가운데 하나와 보다 확실한 기준들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서 자신들의 설립자들의 정신, 그들 복음의 의도, 그들 성덕의 모범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합당하게 축성생활회원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 수도생활의 은사는 ... 항상 교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열매이다.” 『복음의 증거』 11항.

82) Lius Navarro,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Ius Ecclesiae*, 11(1999), 790-792 참조.

83) 수도회 성, 『사도적 활동에 헌신하는 수도회에 적용할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본질적 요소』 22항 참조.

84) 교황 바오로 6세, 『복음의 증거』 26항 참조.

대체된 것도 이를 입증한다.<sup>85)</sup> 1983년 법전 입법 과정에서 은사 공동체인 축성생활회에 관한 용어 자체의 사용에서도 은사적 성격에서 제도적 성격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 은사나 세습자산을 통해 통치 및 장상의 피선거권을 정함에서 자신의 회가 어떤 본성을 갖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작업은 경우에 따라 설립자의 제안들이 당시 교회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정신의 더 넓은 개방성과 법률의 융통성의 맥락에서 그러한 제안들은 제기되고 교회 관할권에 다시 제출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sup>86)</sup> 설립 당시 시대에 교회의 제한된 시각 안에서 교계제도가 설립자의 앞선 영성을 혹이나 허가할 수 없었다면 후대에 다시 수용되도록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과거 성직주의 색채를 띠기도 했던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성직자들을 통한 선교가 교회에 질실히 요구되었다는 것도 고려하면 설립자들의 은사가 당시 교계제도의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잘못 향하여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사를 거행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펼치는 본당이나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성직자가 통치권 참여에 주축이 되는 교계적 특성을 갖는다면 축성생활회에서 장상의 존재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통한 회의 은사 보호와 발전이라는 지향으로 통합적 시각 속에 자각이 열려 있어야 했을 것이다.<sup>87)</sup> 이러한 아쉬움을 접어두고 이번 교황의 답서를 통해 새 희망 속으로 축성생활회의 통치의 확장된 폭과 함께 회의 은사를 통해 회의 통치구조를 다시 비취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축성생활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전망된다.

### 3.3.3. 고유법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회의 은사와 그것이 제도화된 세습자산은 회의 고유법에 담겨 생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회는 축성생활회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85)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2(1981), 170-171.

86)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10 참조.

87) 김현조, 「수도회의 ‘형제적 공동생활’·‘카리스마와 세습자산’·‘사도직’에 관한 교회 문헌과 교회법적 체계 안에서 상호관계」, 『가톨릭신학』, 37(2020, 겨울), 94 참조.

주어진 선물이기도 하기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취지가 고유법을 다루는 제587조에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sup>88)</sup> 교회는 특별히 회들의 회헌을 통해 회들이 교회와 결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회의 회헌은 교회 권위에 의해 승인되거나 승인되어 보편법화된 고유법으로 보편 법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89)</sup> 교회는 회의 설립부터 관계를 맺는데, 특별히 회헌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통해 그러하다.<sup>90)</sup> 이러한 맥락에서 회 고유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87조는 먼저 제578조에 규정된 세습자산을 포함하여 통치와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합체와 양성 그리고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적 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제587조 제1항 참조). 회의 세습자산은 설립자의 의도와 계획과 건전한 전통에 따라 회의 본성, 목적, 정신 및 성격과 같은 모든 요소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고유법에 포함되면서 영적인 요소의 법적 표현의 과정 안에서(제587조 제3항)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 요소<sup>91)</sup>와 함께 회의의 중심점이고 동력인 통치와도 조화를 이루는 장상에 관한 각 회만의 고유법이 탄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교회의 지향 안에서 회들은 나름대로 이를 반영하고자 몸부림친 흔적을 보인다. 일부 회는 최고 장상을 보편법에 표현된 “총원장”이라는 개념 대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총봉사자(minister general), 총수석(prioress general)과 대사부(master general), 아버지 압빠스 등으로 고유법에 묘사하기도 하였다.<sup>92)</sup> 여기서 한계는 회의 은사에 따라 고유한 통치의 색채를 띠려 하였음에도, 명칭 사용의 고유한 선택 정도에 그치고 말았기에, 실제적 공동체 구조에 복음적이고 은사적인 영향이 확실하게 미치도록 통치에 관해 획기적으로 법제화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편법 제588조 제2항의 제약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 조항의 개정으로 회들은 고유법으로 통치구조를 고유하게 구성하는 확대된 폭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발맞춰 보편법에 직권자의 권한으로 유보된 것 중에 일부는 장상들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면, 입법을 통해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그것을 허가받아 실제적 통치의 자치에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다.

88)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24-226.

89) Elio Gambari, *Religious Life: According to Vatican II and the New Code of Canon Law*, (Boston: The Daughters of St. Paul, 1986), 78 참조.

90) “교회 교계의 임무는 ...홀륭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제시한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더 보완된 규칙을 유권적으로 승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자 곳곳에 세워진 수도 단체들이 설립자들의 정신에 따라 자라나고 꽃피우도록 자신의 권위로 감독하며 보호하고 있다.” 『교회헌장』 45항.

91) “회헌에 포함될 사항은 회의 통치 외에도 회원들의 규율, 회원들의 합체와 양성 그리고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에 관한 기본 규범”(제578조 제1항)등이 있다.

92) Beal P.-James A.-Thomas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784.



#### 4. 나오는 말

역사적 흐름에서 중세 이후 그리고 1917년 법전 성문화 과정을 통해 평신도는 교회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평가 속에서 친교의 교회론을 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공의회 정신을 반영한 1983년 입법 과정으로부터 평신도의 통치권 참여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었다. 새 법전은 구 법전처럼 평신도가 교회의 통치권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게 평신도가 통치권의 자격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sup>93)</sup> 이러한 입장은 구 교회법보다는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교회 참여와 시노달리타스 및 비서품자의 통치권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축성생활회의 경우 교계의 통치권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음에도 제588조 제2항은 성직자회에서의 통치를 성직자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588조 제2항을 개정 적용하게 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답서를 통해 공의회에 담긴 교회의 이해인 친교와 참여의 원리 및 시노달리타스가 회에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의 형제적 (공동)생활, 은사적 공동체 및 고유법을 통해 통치구조의 다양성도 전망하게 되면서 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실상 이것은 축성생활회가 교계제도로 흡수되면서 발생하였던 획일화되고 경직된 구도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은사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새 출발이라 볼 수 있다. 축성생활은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천상 영광을 예고하고(제573조) 형제적 (공동)생활로 가족처럼 결속되는(제602조) 은사적 삶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특별한 기능 외에 차별이 없어야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쉽다. 축성생활 신분은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인 청빈, 정결,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과 교회에 현존하게 하는 존재들로 표현된다(교회헌장 44항-46항, 축성생활 22항, 24항). 이 신분은 교계적 신분 구분인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며 그리스도를 재현하려는 삶의 방식 안에서 참된 본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축성생활의 전망과 발전된 신학에 비추어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588조 제2항을 개정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성생활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93) 호세 카스타뇨, 『교회 헌법학 입문』, 141-144 참조.

## 참고문헌

### 교회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Lumen Gentium*,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 교령』(*Perfectae Caritati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축성 생활과 사도생활단성/주교성, 지침, 『상호 관계(*Mutuae Relationes*)』,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2008.
- 바오로 6세,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 \_\_\_\_\_, 권고 『복음의 증거』(*Evangelica Testificatio*, 197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의 은총』(*Redemptionis Donum*, 198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 \_\_\_\_\_, 권고 『축성 생활』(*Vita Consecrata*, 199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 수도회 성, 규범,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수도회에 적용할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본질적 요소』(*Essential Elements in the Church's Teaching on Religious Life as applied to Institutes dedicated to Works of the apostolate*, 1983)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2008.
- Sacra Congregazione per I Religiosi e Istituti Secolari, 『Clericalia instituta』(1969. 11. 27): AAS 61(1969).
- Sacra Congregazione per I Religiosi e Istituti Secolari, 『Decreto Religionum Laicalium』(1966. 5. 31), in AAS 59(1967)
-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Rescritto del Santo Padre Francesco circa la deroga al can. 588 §2 CIC』, 18. 05. 2022(검색일: 2022년 8월 8일,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5/18/0371/00782.html>)
-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2(1981), 151-211.
-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22-66.
- Coetus studiorum de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per professionem consiliorum evangelicorum, *Communicationes*, [s. l.], v. 11(1979), p. 296-346.

Coetus Studiorum, “De Normis generalibus”, Series Altera. Sessio III *Communicationes* v. 23 (1991), 211-243.

Liber I, De Normis Generalibus, *Communicationes*, [s. I.], v. 14(1982), 127-154.

Relatio, complectens synthesim animadversionum ab Em. Mis atque Exc. Mis patribus Commissionis ad Novissimum schema Codicis Iuris Canonici exhibiturum, cum responsionibus a secretaria et consultoribus datis; Liber II, Pars III, Sectiones I-II. *Communicationes*, [s. I.], v. 15(1983), 57-88.

## 단행본

테빠올리스·다우리아(De Paolis, V.:D'Auria, A.), 『일반규범』, 김효석 옮김, 서울: 가톨릭 대학교출판부, 2017.

박상기 외,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6제5판.

사바레세 루이지(Sabbarese Luigi),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교계제도』, 박희중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도밍고(Andrés Gutiérrez Domingo),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한영만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이찬우 편저, 『수도자와 봉헌생활: 교회법 제573-746조(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작은형제회, 『작은형제들의 수도규칙 회헌 총규정』, 2015.

카스타노 호세(Castaño José), 『교회 헌법학 입문』, 한영만 옮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1.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회헌과 규칙』, 2016.

한영만, 『가톨릭교회 형법』,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2.

Beal John P.-Coriden James A.-Green Thomas J.,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New York: Paulist Press, 2000.

Sabbarese Luigi, *I Fedeli Costituiti Popolo di Dio: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Libro II, Parte I*,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3.

Beyer J.,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Ancora: Milano, 1989.

De Paolis, V.,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Mosca, Vincenzo,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 Corecco Eugenio, *Natura e struttura della "Sacra potestas"*, Piemme, 1997.
- Gambari Elio, *Religious Life: According to Vatican II and the New Code of Canon Law*, Boston: The Daughters of St. Paul, 1986.
- García martin Julio,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Venezia: Marcianum press, 2015(6ed).
- Gerosa Libero, *Canon Law*, London/New York: Continuum, 2002.
- Iannone, F., *IL Capito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 간행물

- 김현조, 「수도회의 ‘형제적 공동생활’·‘카리스마와 세습자산’·‘사도직’에 관한 교회 문헌과 교회법적 체계 안에서 상호관계」, 『가톨릭 신학』 37(2020, 겨울), 63-104.
- 박동균, 「평신도의 신분: 현행 교회법전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상』 13(1995), 29-55.
- 서명옥, “‘하느님 백성’ 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전망* 187(겨울), 2014, 150-154 참조.
- 유지 스가와라,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이규용 옮김, 『사목연구』 46(2021, 여름), 109-133.
- Esposito B., “Alcune riflessioni sul superiore maggiore in quanto ordinario e sulla valenza ecclesiologica e canonica della qualifica”, in *Ang* 78(2001), 669-731.
- Navarro Luis, “Le forme tipiche di associazione dei fedeli”, *Ius Ecclesiae*, 11(1999), 771-797.

## 성직자회에서 성직자 통치규정 개정의 적용과 의미: 교황 프란치스코의 제588조 제2항 개정(derogatio) 답서를 중심으로

김현조

축성생활회 가운데 성직자회들을 위시하여 많은 남자 회에서 총원장을 포함한 상급장상의 자격이 성직자여야 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회법 제588조 제2항이 “성직자회는 성직자의 통치아래” 살아가는 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이 조항은 현 교황 프란치스코의 2022년 2월 11일 답서를 통해 개정 적요된다.

이 하나의 조항 개정 적용이 갖는 의미와 영향은 축성생활회 가운데 성직자회에만 국한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성 축성생활회를 포함한 비성직축성생활회의 신원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 교황 답서에 의한 제588조 제2항 개정 적용의 의미를 논술하는 이 연구는 먼저 통치권에 관한 법체계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즉, 축성생활회의 장상의 권력이 교회 통치권에 속하는지에 관한 숙고와 교회 통치권에 속하는 회와 그렇지 않은 회가 갖는 제588조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어 본 답서의 내용과 그 적용을 다루면서 답서에 언급되지 않은 교구설립성직회의 고유법 폐지(개정) 문제를 일반규범에 비추어 두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후 축성생활회에 관한 발전된 신학의 기초 위에 축성생활 신분이 교계적 신분인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원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숙고에 기반을 둔 통치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면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구성이 축성생활회의 은사적 특성, 형제적 (공동)생활 측면, 고유법의 고려 등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제588조 제2항을 통한 성직자 중심의 축성생활회의 구조화는 축성생활회의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의 개정 적용과 함께 형제적 (공동)생활, 은사의 삶, 고유법의 관점에서 자신의 회에 어울리는 고유한 통치구조를 축성생활회들이 새롭게 발견하여 적용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본 연구에 담아 전망해 보았다.

**주제어:** 시노달리타스, 은사, 통치권, 법률 폐지(개정), 형제적 공동생활

## Application and meaning of the derogation of the norm of clerical Institution (Focused on Pope Francis' rescript to the abrogation of canon 588, paragraph 2)

Kim, Hyun-Cho

Among the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many men's institutes, including the Clerical Institute, stipulates the restriction that the qualifications for the major superior, including the general superior, must be a priest. This is because Article 588, paragraph 2 of the Canon Law stipulates that “the clerical Institute is under the rule of clerics”. This article was abrogated by the Pope Francis in a rescript on February 11, 2022. The meaning of the abrogation of this one *article* is not only limited to the clerical Institute among the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This allows us to take a fresh look at the inherent value of the identity of member of the non-clerical Consecrated Life Institutes, including female convents. This study, which discusses the validity of abrogating Article 588, paragraph 2 by this papal rescript, first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power of governance. In other words, It studied whether the power of the superiors of the Consecrated Life Institutes belongs to the church's power of governance and the problems of Article 588 between those belonging to the power of governance of the church and those not belonging to the power of governance of the church. Then, the contents of this rescript and its application were discussed. Two hypotheses were presented in light of the general norms, regarding the abrogation of the proper law of the diocesan clerical Institutes, which was not mentioned in the rescript. Finally, on the basis of the developed theology of the Consecrated Life Institute, The aspect that the form of the government structure should be structur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status of the

Consecrated Life is a new status beyond the dualistic distinction of clergy and laity, which are hierarchical statuses was discussed. And from the viewpoint that its composition should be diverse according to the charismatic characteristics of the Consecrated Life Institute, the aspect of fraternal communal life, and consideration of the proper law,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tructuring of the Consecrated Life Institute through Article 588, paragraph 2 does not corresponds to the unique character of the Consecrated Life Institute. With the abrogation of this Artic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the prospect of how the Institutes of the Consecrated Life give new meaning to the governance of the Institutes in terms of the fraternal communal life, the charismatic life, and the proper law, and how to apply it to their own Institutes.

**Key Words:** sinodalitas, charisma, power of governance, derogation of the law, fraternal communal life

---

논문 투고일	2023년 2월 24일
논문 수정일	2023년 4월 4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